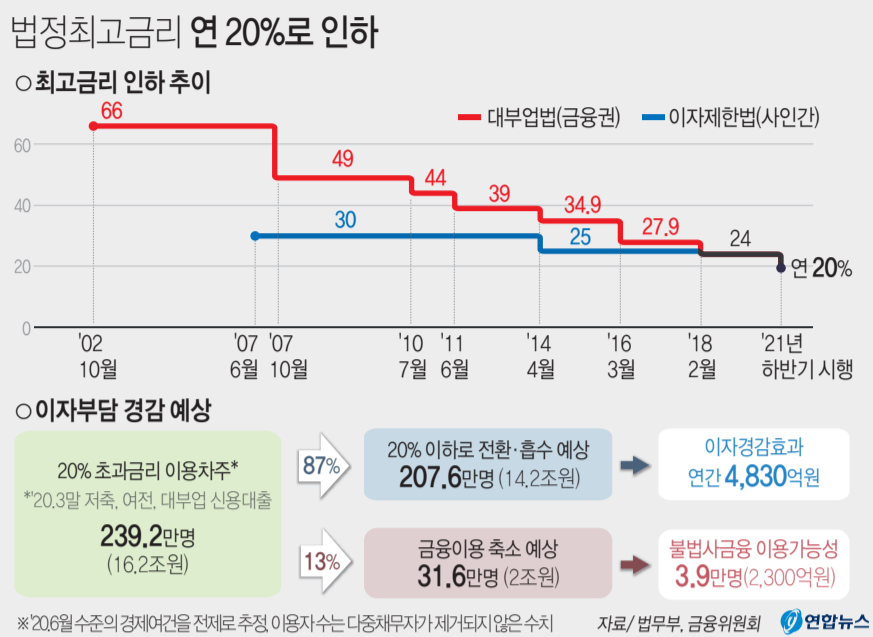


# 법정 최고금리 4%p 인하... 이자부담 年 4830억 줄어든다

내년부터 24%서 20%로 내리  
고금리 대출 저신용자 부담 완화  
서민금융공급에 年 2700억 확대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할 방침이어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저신용자는 이자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일부 저신용자는 대출절벽에 몰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대부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통해 대출절벽에 몰린 저신용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물론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볼 수 있고 따라서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중 약 87%(208만명)은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감소한다. 다만 나머지 약 31만6000명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3~4년 이후 금융이용이 축소되고, 이중 약 3만9000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 최고금리가 인하하는 시점인 내년 하반기부터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전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회사에서 흡수하지 못한 차주 중 60%는 자율조정으로

나머지 40%중에서 28%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12%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며 “40%가 필요한 수요만큼 정책서민금융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의 불법이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100만원을 20%로 빌려 갚지 못한 경우 연체 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구두나 계약서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출약정을 무효화하는 법안이다.

이 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안들이 내년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통한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대부업권 등 고금리 업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신용 공급을 모범적으

로 수행한 업체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위반한 업체에는 처벌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지나번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분석하면서 이자경감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탈락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업계와 함께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공급한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햇살론17 등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조정도 검토 중이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상품으로 17.9%의 금리가 적용되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이 국장은 “최고금리가 20%로 내려오면 햇살론17 금리도 내려오는 것이 맞다”며 “인하 폭이나 시기 등은 시행과 관련한 시점에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최고금리 인하 자동 소급적용 시행안해”

### 금융위 일문일답

만기시 갱신, 대환대출 등 활용해야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인하 시점에 바로 20%이하 금리가 적용되는 ‘자동소급’은 시행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여신거래기준 약관을 개정했다. 즉,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만기시 갱신 등을 통한 새로운 계약체결이나 대환대출을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위원회 e브리핑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대출은 결국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무조건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는 좀더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없으신 사람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의 일문일답.

**-최고금리가 24%일 때 정책서민금융 상품 햇살론17은 연 17.9% 였다.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하면 햇살론도 인하는 건가.**

“햇살론17은 최고금리가 24%인 시기에 대부업을 통해 24%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은 차주를 위해 마련한 대안

상품이다. 당연히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게 되면 햇살론17 금리도 낮아진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인하할 지 여부는 본격적으로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했으니 햇살론17 금리도 17.9%에서 13.9%로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금리가 내려오면 기존 2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도 소급적용을 받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 소급적용은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의 대출계약에도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만기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들은 고금리를 계속 이용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환능력이 있으신 차주들은 대환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 27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공급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얼마를 확대할 지 정해졌나. 공급확대시기는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내년 하반기부터인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근로자 햇살론이 대표적이다. 제일 금액도 크다. 그다음에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새희망플러스, 햇살론 유스 등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 정책대안상품도 출시해 금융이용이 축소된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대범위, 시기 등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시점에 맞춰 같이 발표 하겠다.”

나유리 기자

## 등급시스템 등 평가기준 마련 ‘과제’

### >> 1면 ‘ESG 경영’서 계속

다른 운용사 관계자도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의 ESG 모임이 생겨날 정도로 최근 들어 ESG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늘었다”며 “ESG 요건이 미흡한 회사는 점점 투자받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G 요소를 갖추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투자유치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SG 중요도가 높아지며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이 부각되면서다. ESG 펀드 편입 과정에서 지배구조(G)의 점수 비중이 제1크다.

이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도 국내 상장사는 창업주나 후손이 직접 경영하고 있지만 이제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국내 증시에서도 본격화될 수 있는 단계”라며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지형도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결음마 멘 국내 ESG, 투자문화 정착 중**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 기대 속에도 표준화된 등급시스템 부재 등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평가하는 외부기관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른편더러 ESG 펀드의 경우 일반 펀드와 뚜렷한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환경 지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부족한 탓에 환경 지표를 정의하는 방법과 정보의 부족 등으로 평가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국내 ESG 투자는 이제 막 걸

음마 단계를 뚫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봉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계량화된 ESG 지표를 실제 투자에 반영하는 중”이라며 “운용사와 연기금이 ESG 펀드 상품 출시를 확대하며 ESG 투자가 성장 선순환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 대표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KRX)도 ESG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달부터 ESG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가 이날 산출을 시작한 ‘탄소 효율 그린뉴딜지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탄소 감축 노력을 진행할 것이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명분 있는 발걸음”이라며 “향후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상품에 대한 운용사와 연기금 등의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1.5단계 격상 땐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 1면 ‘코로나 신규 확진’서 계속

강원도 등 선제적 격상한 곳도

지역별로는 서울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128명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나흘 연속 100명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최근 새롭게 적용한 거리두기 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10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이 기준을 넘어서면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전일 수도권과 강원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가능성을 경고하는 ‘예비 경보’를 발령했지만,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며 단계 격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지역 부대에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

상해 적용하기로 했다.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 지역도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박후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도권과 강원권의 경우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60대 이상 환자 비율,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 등 다양한 참고 지표를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학교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야 하며, 축제 등 일부 행사에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 활동 참여와 스포츠 관람도 전체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되며 기관·부서별 재택근무도 확대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